

# 독일 예측치안 결정

【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세미나】 발표 자료

“인공지능 예측치안 독일 위헌 결정” (2024. 2.)

발제: 유승익 (한동대학교 연구교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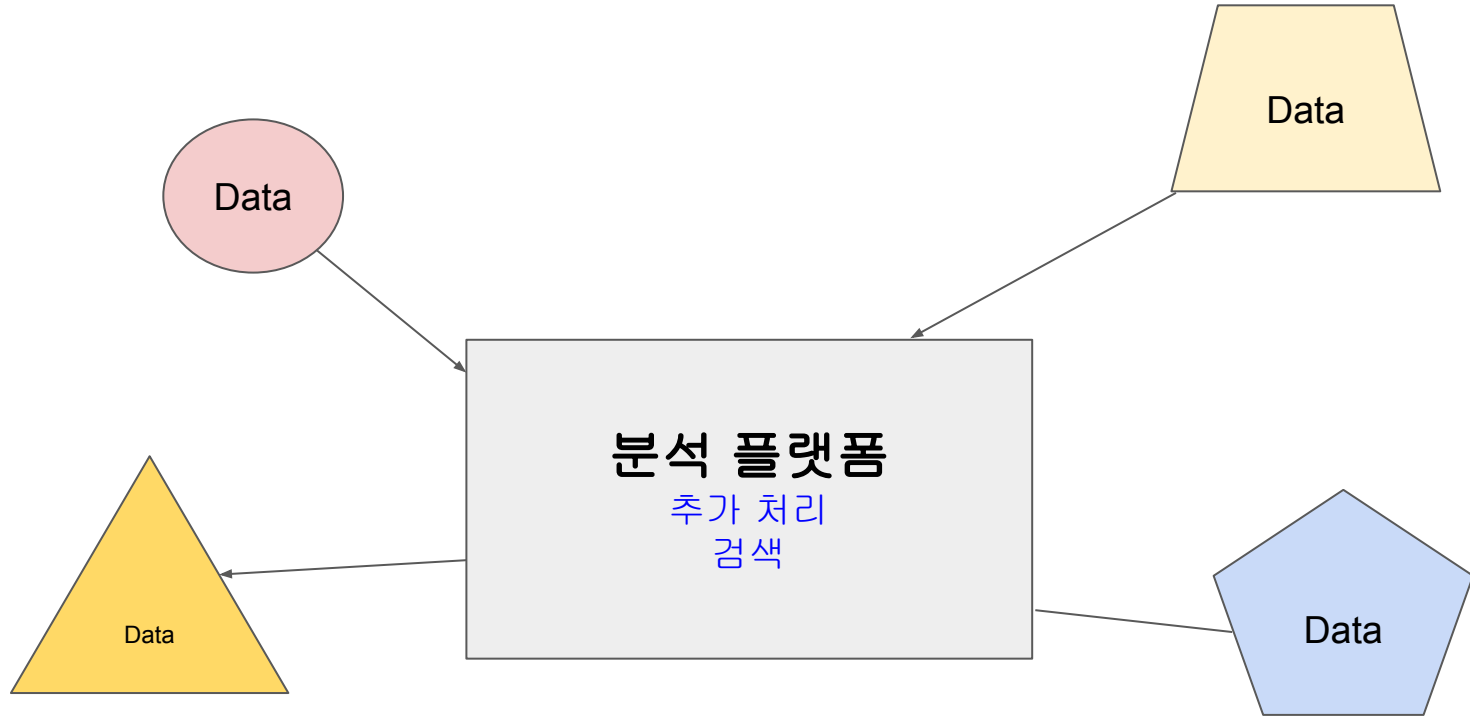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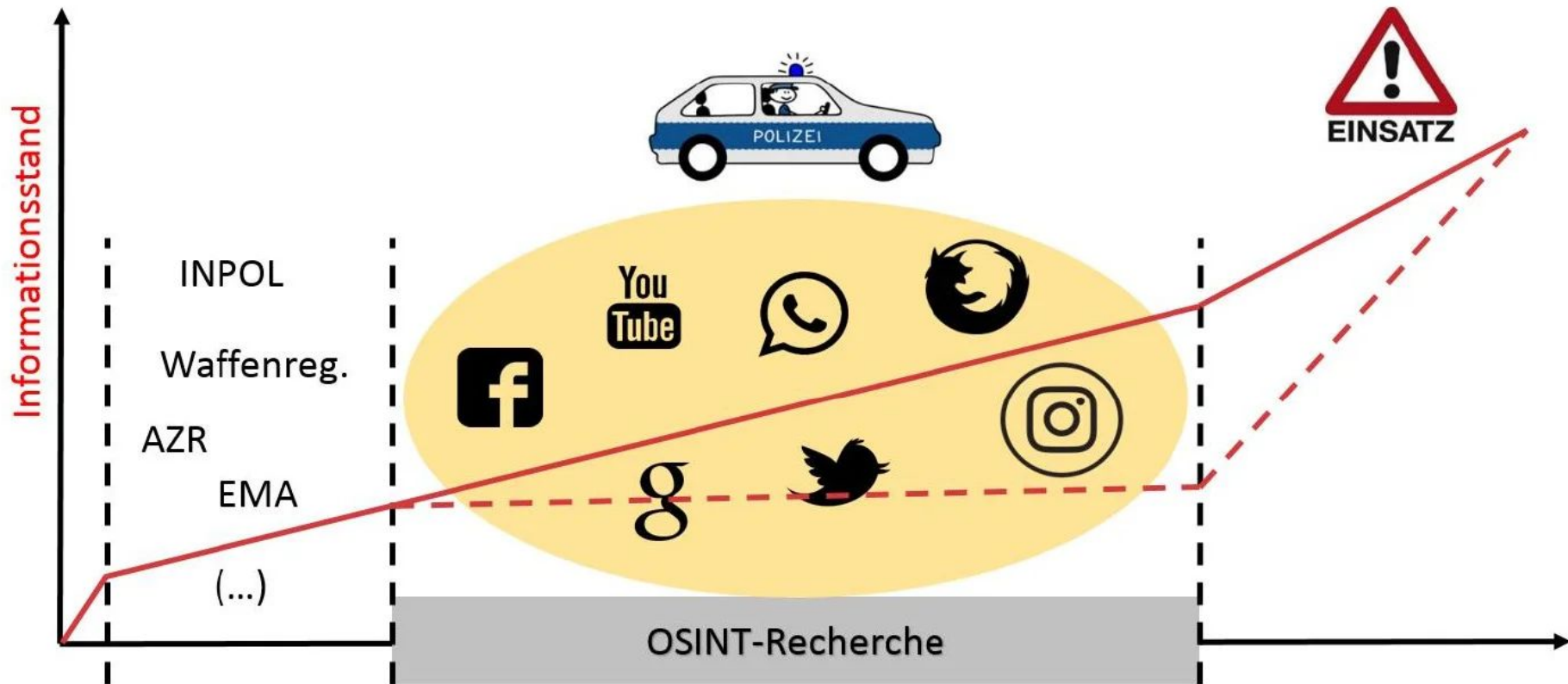
hessenDATA  
Daten-Analyseplattform

HESSE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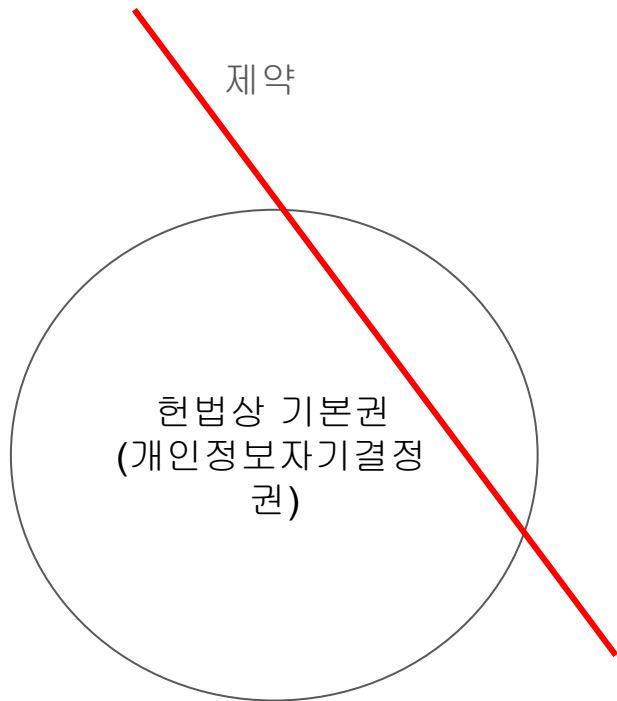


# HessenDAT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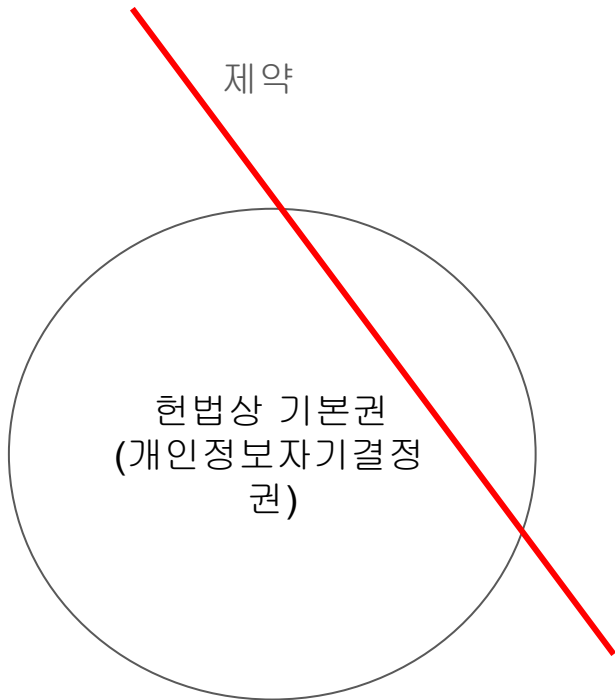


# 기본권 제약의 헌법적 정당화



- 기본권 제약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
  - (형식적) 의회제정법인 **법률**  
→ 행정명령 등으로 위임할 수 있으나, 법률유보원칙 준수해야 함
  - (내용적) **비례성원칙**

# 비례성원칙의 적용



- **목적의 정당성**
  - 범죄 예방의 실효성 증대라는 목적은 정당
- **수단의 적합성**
  - 범죄 예방 효과를 실제로 높임. ex. 시간절약
- **침해의 최소성(필요성)**
  - 다른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를 생성하는데 동일한 효과를 생성할 수 없음
- **법익의 균형성(좁은 의미의 비례성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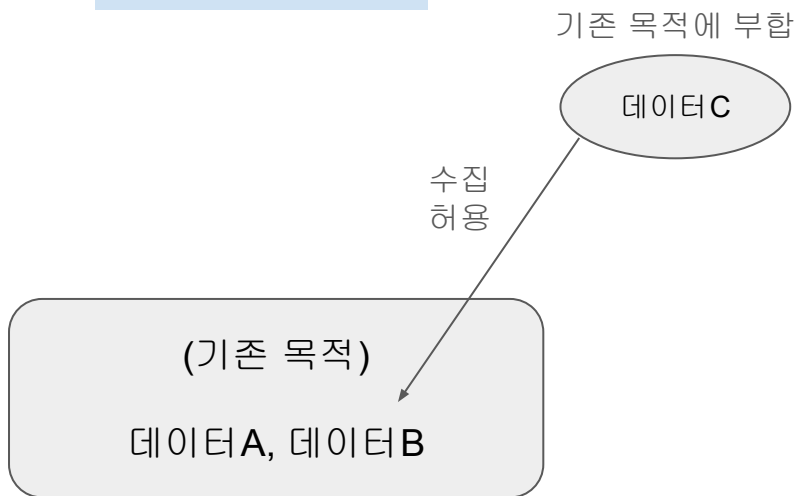
#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적용: 목적구속과 목적변경

- 이전의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 
제약의 비중에 따라 결정
- 연방범죄수사청법에 관한  
결정에서 법리 제시
  - 목적구속의 원칙
  - 목적변경의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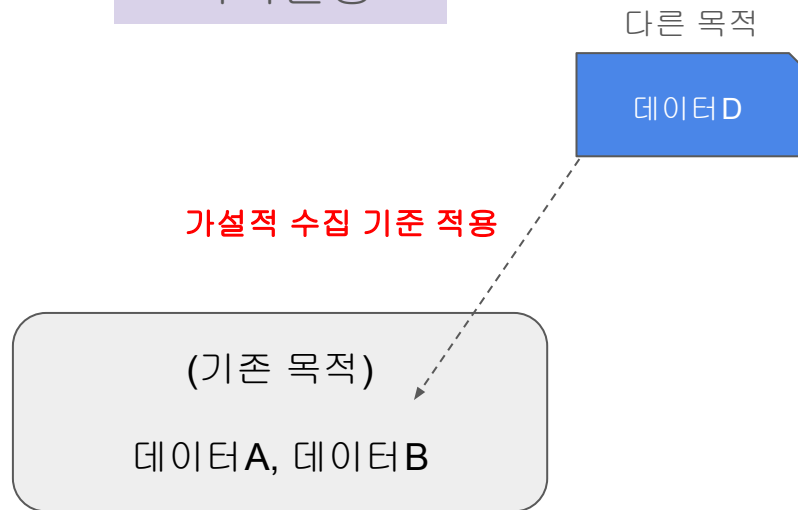


# 목적구속의 원칙과 목적변경의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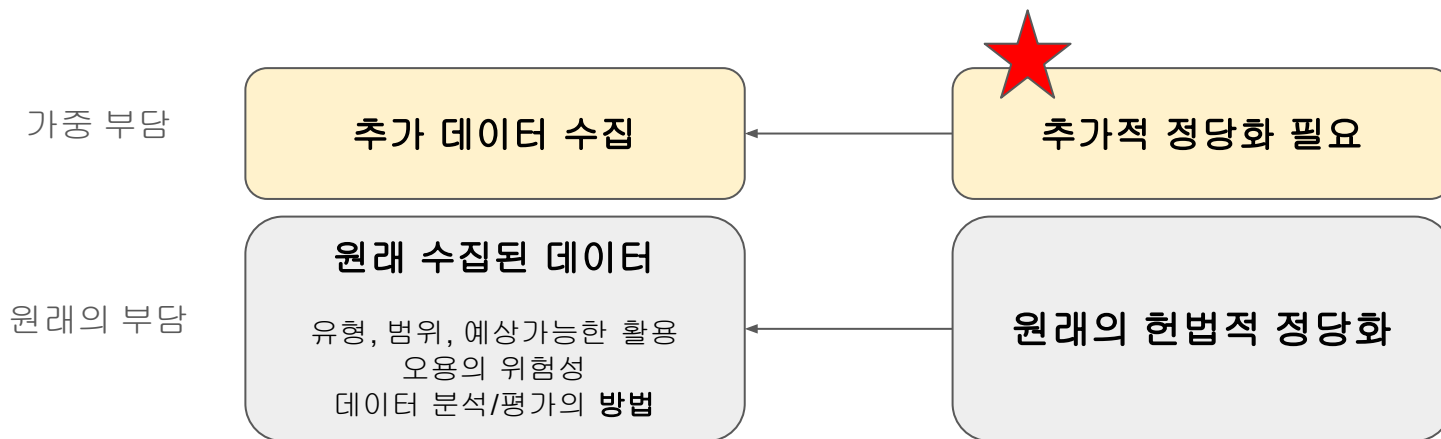
## 목적구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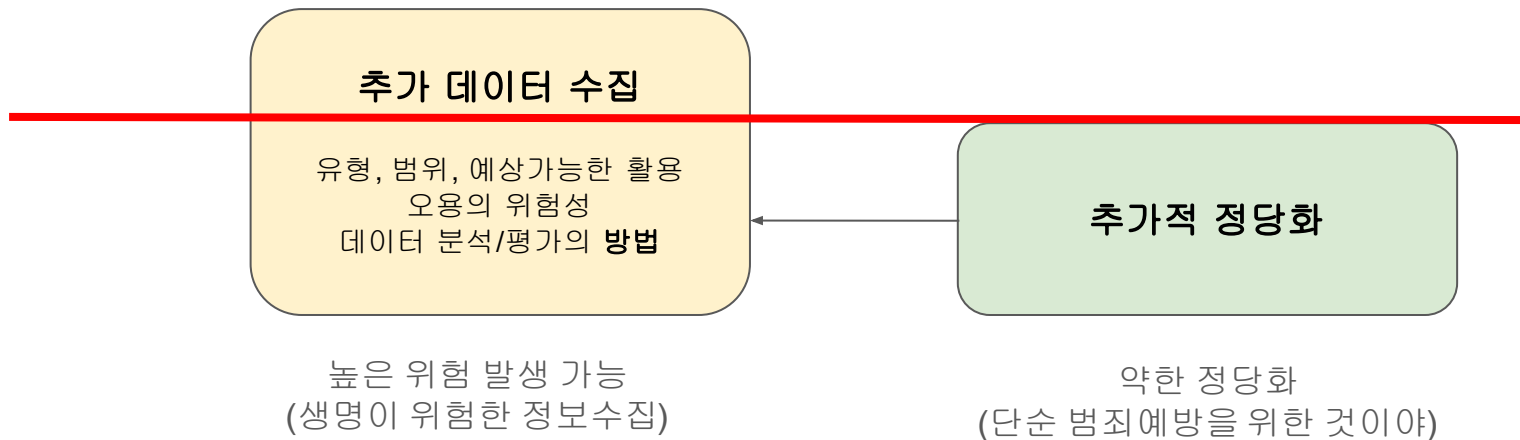
## 목적변경



# 데이터 추가 처리를 위한 헌법적 정당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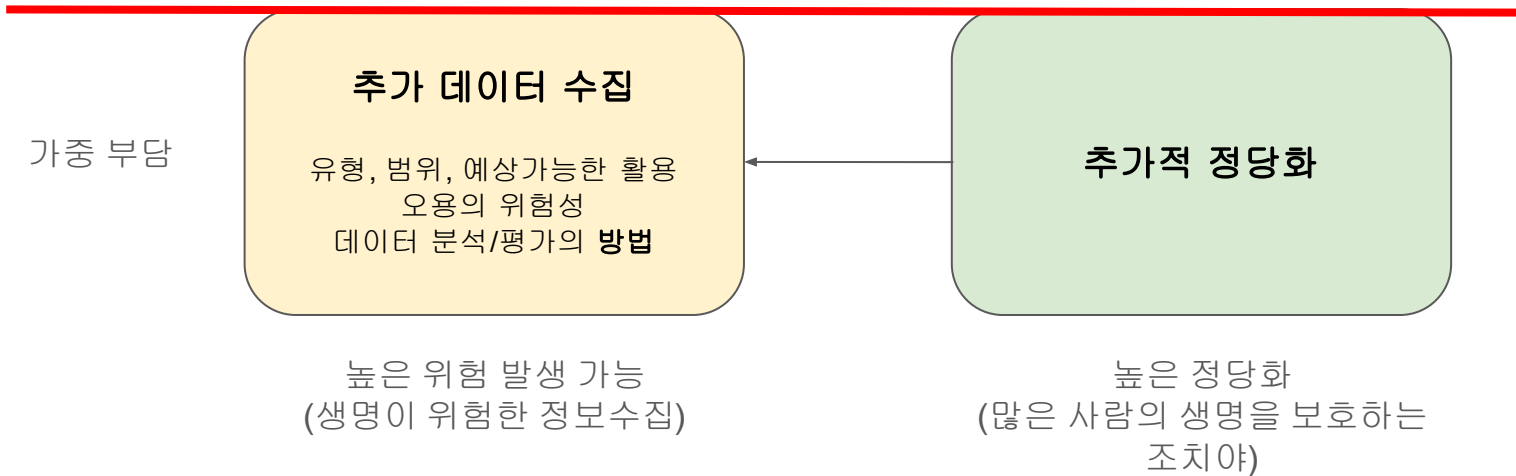


# 연습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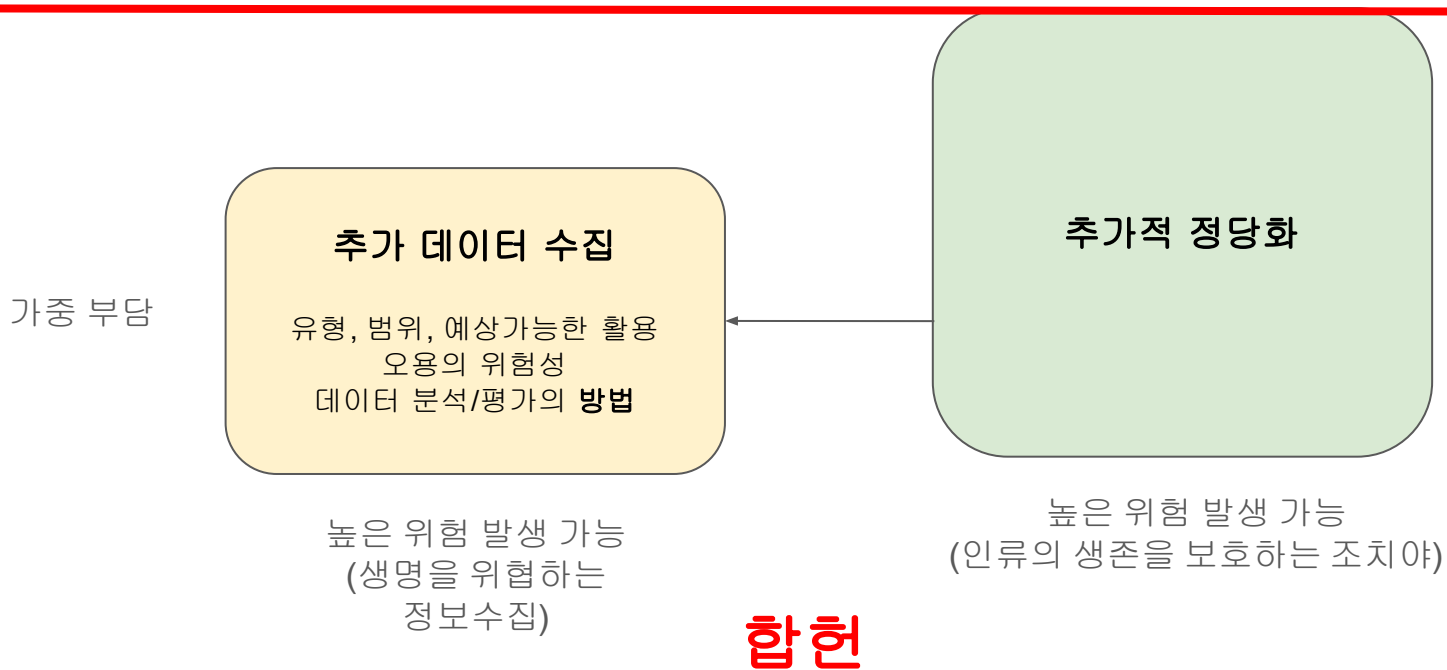
**헌법 위반**

## 연습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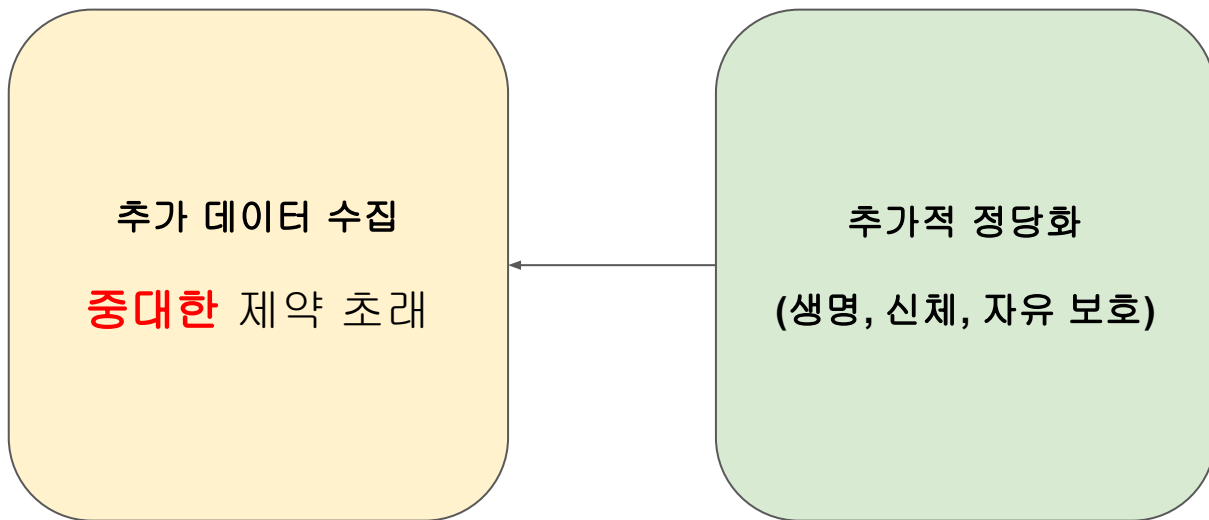


**합헌**

# 연습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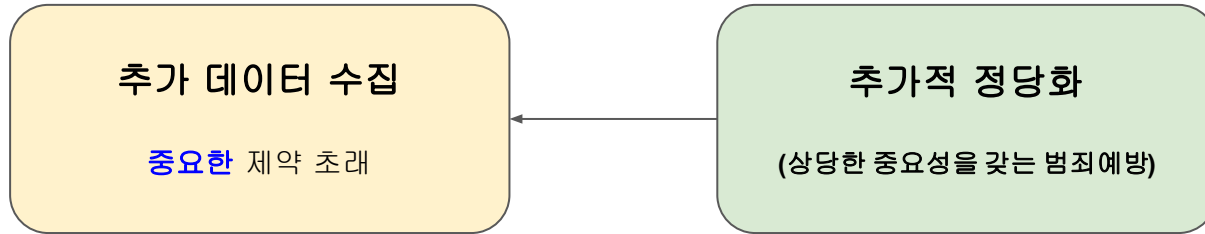


# 충분히 구체화된 위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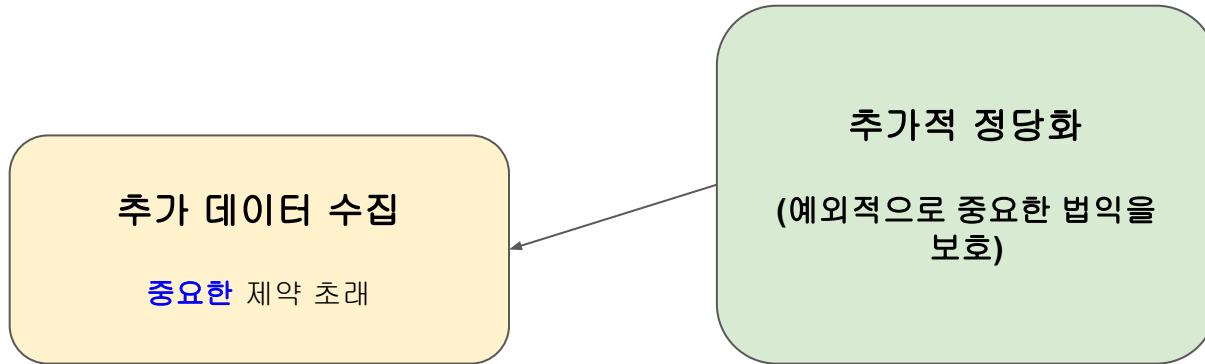
충분히 구체화된 위험

# 구체화된 위험



구체화된 위험

# 구체화된 위험에 미치지 못하는 제약



구체화된 위험에 미치지 못하는 제약의  
한계



## 목적구속 원칙 준수해도 되는 경우

-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과 범위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, 자동화된 분석 또는 평가의 가능한 방법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어 그 권한에 기반한 조치를 통해 경찰청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자동화된 적용 없이도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정보주체의 개인 생활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지 못하거나, 처음부터 그 권한의 목적이 개인 관련 정보를 생성하지 않고 위험하거나 위험에 처한 장소를 식별하는 데만 있다면 **목적구속 원칙을 준수**하는 것만으로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